

보도시점 2026. 6. 15.(월) 조간
2026. 6. 14.(일) 12:00

배포 2026. 6. 12.(금)

복지 위기가구, 10년간 지원인원 88만 명으로 44배, 지원율 64%로 48%p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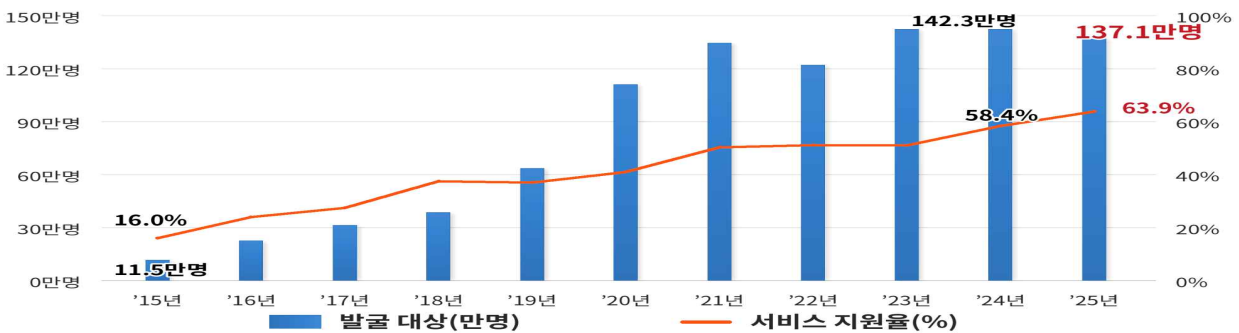
- '24년 대비 지원 인원 4.6만 명 증가, 지원율 5.5% 상승 -
- 지방정부별 위기가구 지원 규모와 복지서비스 제공 실적 최초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15년 12월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위기정보 연계 확대, 발굴모형 개선 등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보다 촘촘히 찾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규모는 '15년 11만 명에서 '25년 137만 명으로, 지원 인원은 '15년 2만 명에서 '25년 88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지원율은 '15년 16.0%에서 '25년 63.9%*까지 높아져, 시스템 운영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지원율, 취약계층이 아니거나 거주지 확인 불가 등의 경우 미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발굴 및 지원 현황>



또한, '25년에는 발굴대상자가 '24년보다 5.2만 명 감소하였음에도 복지서비스 지원 인원은 4.6만 명 증가하고, 지원율은 5.5%p 상승하여 위기 가구 선별과 발굴의 정확도가 향상되고, 복지서비스 지원 연계 체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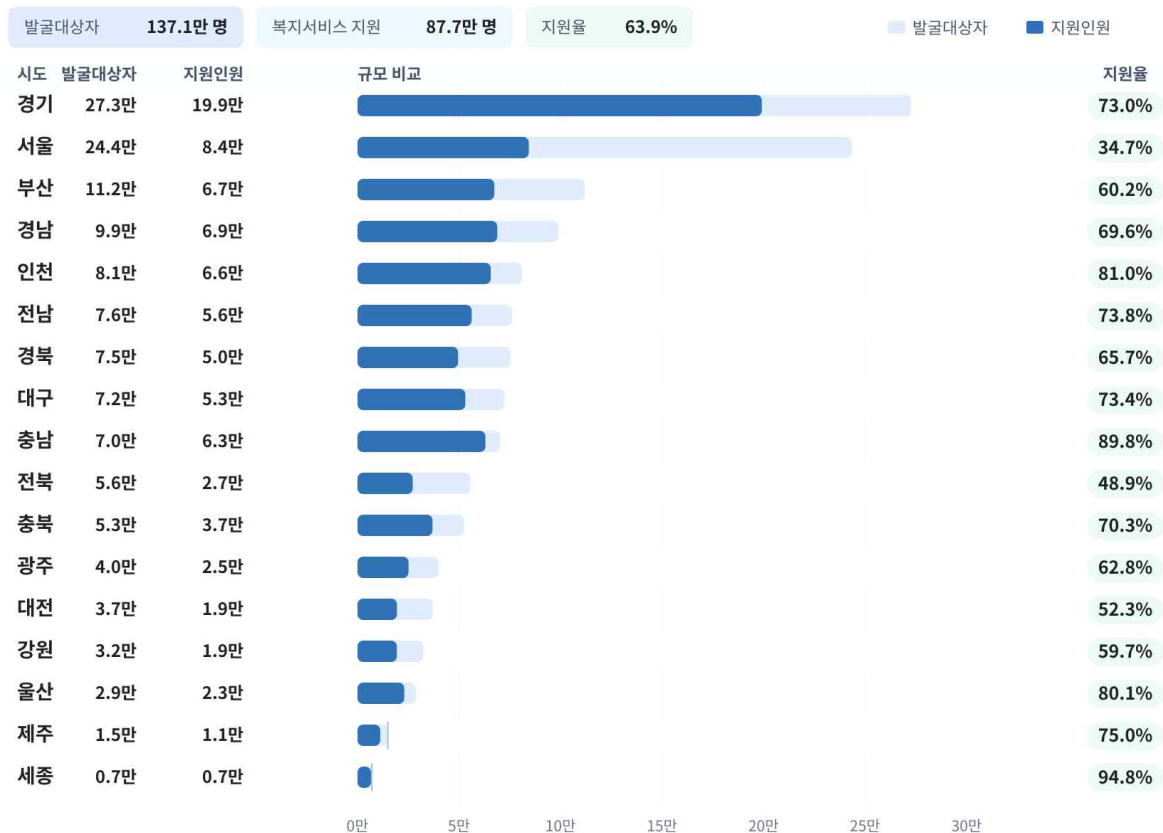
지원 서비스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공공서비스*를 지원받은 인원은 29.8만 명이고 민간서비스를 지원받은 인원은 57.9만 명이다. 공적 급여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는 후원물품, 민간기관 자원 연계 등 민간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하여 지원하였다.

* 기초생활보장급여 5.8만 명, 차상위 지원 1.3만 명, 긴급복지지원 2.5만 명, 기타 공공 복지서비스(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사회서비스이용권 등) 20만 명

시도별 지원 결과를 살펴보면, 발굴대상자는 경기 27.3만 명, 서울 24.4만 명, 부산 11.2만 명, 경남 9.9만 명, 인천 8.1만 명 순으로 많았다. 발굴 규모는 주로 인구 규모가 큰 시도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발굴대상자 대비 복지서비스 지원율은 세종 94.8%, 충남 89.8%, 인천 81%, 울산 80.1%, 제주 75% 순으로 높았다. 특히 인천은 발굴 규모 상위 5개 시도에 포함되면서도 지원율도 81%로 높아, 발굴과 지원 연계가 모두 활발히 이루어진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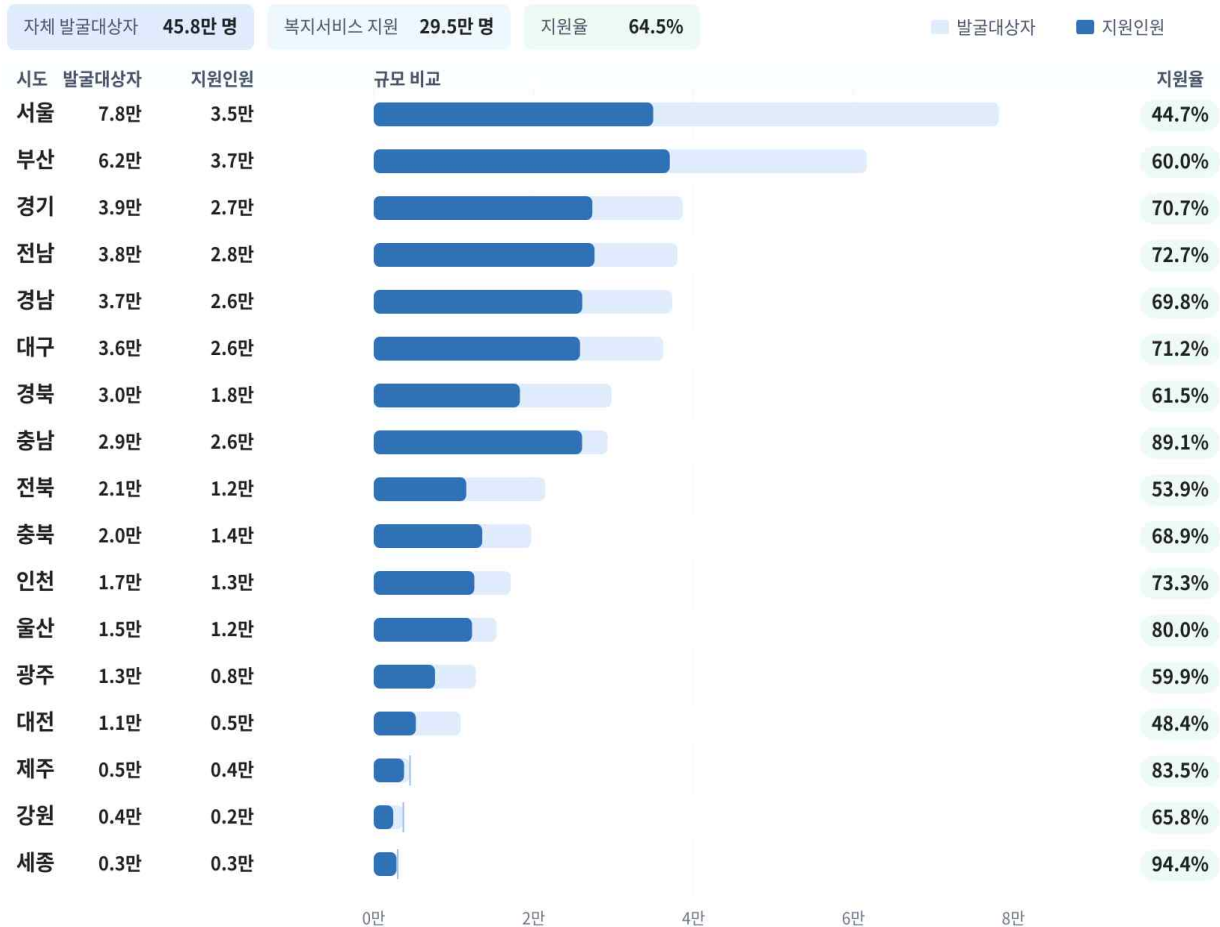


또한 보건복지부는 21개 기관으로부터 입수된 47종 위기정보 보유대상 전체를 지방정부에 제공하여 각 기관이 지역 특성을 반영해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지방정부 자체발굴을 통해 45.8만 명을 발굴하고 이 중 29.5만 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다.

지방정부별로는 경기, 전남, 경남, 대구 등이 자체 발굴 규모와 지원율이 모두 높아,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자체 발굴이 실제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세종과 전북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복지급여 중지자를 발굴·지원하는 등 지역별 복지 수요에 맞춘 발굴을 통해 급여 중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공백을 보완하였다.

<17개 시·도 지방정부 자체발굴 및 지원 현황>



보건복지부는 2026년에도 5회에 걸쳐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찾아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난 4월까지 지방정부에 발굴대상자로 전달했으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약 3천 명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6월 중에 일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6월부터는 매월 복지사각지대 및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에 대한 지방정부별 지원 실적을 공유하여, 상담·조사와 지원이 완료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한 지방정부의 확인을 지속 독려할 예정이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 직무대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조기에 찾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라며, “’25년에는 발굴대상자 중 63.9%가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등 발굴 이후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 연계 성과가 향상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지방정부별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서비스 지원 실적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인적안전망을 통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촘촘하게 찾고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붙임> 1.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요
2. 2025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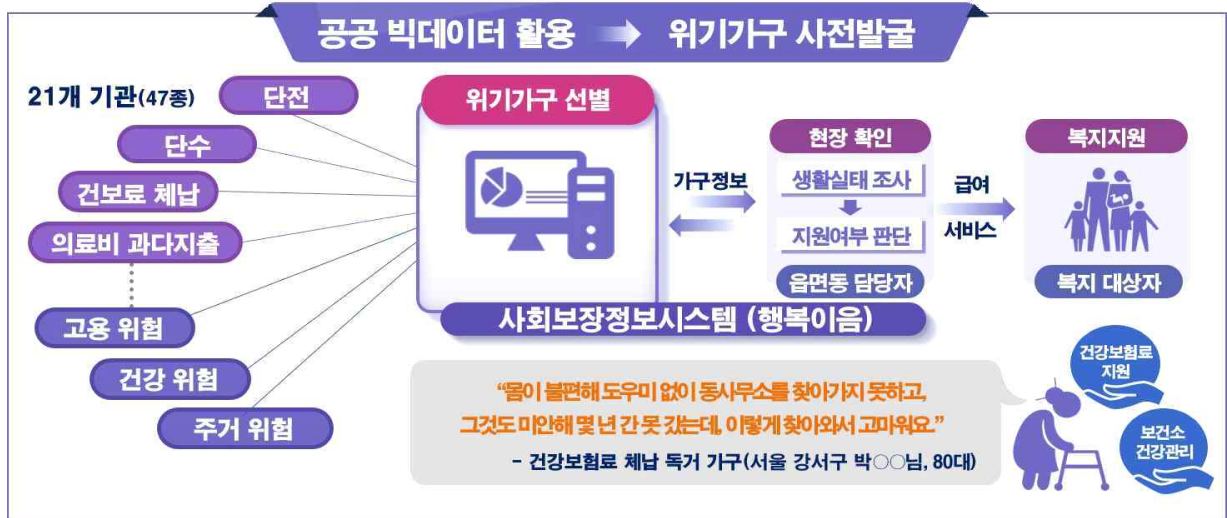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	책임자	과 장	홍화영	(044-202-3170)
		담당자	사무관	김지혜	(044-202-3161)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책임자	과 장	서일환	(044-202-3120)
		담당자	서기관	이준석	(044-202-3123)



붙임 1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요

- (현황) '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발굴시스템 구축·운영('15.12~)
- (절차) 단전·단수 등 21개 기관의 47종 위기정보를 입수 분석하여 고위험 가구를 선별*, 지자체를 통해 상담·조사 후 복지 지원
 - * 회차당 약 20만 명 규모(중앙발굴 약 15만 명, 지방정부자체발굴 약 5만 명)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대상자를 방문, 전화 등을 통해 확인 후, 필요한 서비스 지원



- (발굴 대상 선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발굴모형, 기획발굴* 등 병행
 - * 정책적 목적(채무위험자 등), 시의성에 따른 대상(어름겨울철 주거 취약 대상자 등) 선정발굴
- (지방정부 발굴 지원)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맞춤형 발굴 기능 제공*('22.12.~)
 - * 지방정부가 전체 입수대상자 중 인적정보(장애인, 노인 등), 위기정보(의료위기, 주거취약, 고용위기 등) 조건을 입력하여 자체적으로 발굴대상자 선별
- (성과) 발굴시스템 구축 이후('15~'25년) 945만 명을 지자체가 조사하여 461만 명(48.8%)*에게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지원
 - * 기초생활보장 255,920명, 차상위 81,931명, 긴급복지 135,503명, 기타공공서비스 887,087명 등

붙임 2

2025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현황

□ 전년 대비 '25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현황

(단위: 명, %)

연도	발굴 대상 (a)	복지서비스 지원(b) (b/a x 100)	공공 서비스					민간서비스 연계(d)** (d/b*100)
			소계(c) (c/b x 100)	기초 생활보장	차상위	긴급 복지	기타 공공 서비스*	
'24년	1,423,466	831,660 (58.4%)	252,425 (30.4%)	48,451 (5.8%)	9,888 (1.2%)	23,796 (2.9%)	170,290 (20.5%)	579,235 (69.6%)
'25년	1,371,307	876,613 (63.9%)	298,060 (34.0%)	58,703 (6.7%)	13,253 (1.5%)	25,355 (2.9%)	200,749 (22.9%)	578,553 (66.0%)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사회서비스이용권(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 (민간서비스) 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민간기관 결연후원금 등

□ '25년 복지사각지대 차수별 발굴·지원 현황

(단위: 명, %)

차수	발굴 대상 (a)	복지서비스 지원(b) (b/a x 100)	공공 서비스					민간서비스 연계(d)** (d/b*100)
			소계(c) (c/b x 100)	기초 생활보장	차상위	긴급 복지	기타 공공 서비스*	
'25년 1차	225,091	139,140 (61.8%)	44,222 (31.8%)	9,350 (6.7%)	1,775 (1.3%)	4,787 (3.4%)	28,310 (20.3%)	94,918 (68.2%)
'25년 2차	225,254	142,457 (63.2%)	45,917 (32.2%)	10,472 (7.4%)	2,162 (1.5%)	4,861 (3.4%)	28,422 (20.0%)	96,540 (67.8%)
'25년 3차	231,604	151,311 (65.3%)	48,171 (31.8%)	10,013 (6.6%)	2,247 (1.5%)	4,600 (3.0%)	31,311 (20.7%)	103,140 (68.2%)
'25년 4차	239,531	153,156 (63.9%)	47,966 (31.3%)	10,396 (6.8%)	2,868 (1.9%)	4,021 (2.6%)	30,681 (20.0%)	105,190 (68.7%)
'25년 5차	228,976	151,120 (66.0%)	61,353 (40.6%)	8,929 (5.9%)	2,387 (1.6%)	3,700 (2.4%)	46,337 (30.7%)	89,767 (59.4%)
'25년 6차	220,851	139,429 (63.1%)	50,431 (36.2%)	9,543 (6.8%)	1,814 (1.3%)	3,386 (2.4%)	35,688 (25.6%)	88,998 (63.8%)
합계	1,371,307	876,613 (63.9%)	298,060 (34.0%)	58,703 (6.7%)	13,253 (1.5%)	25,355 (2.9%)	200,749 (22.9%)	578,553 (66.0%)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사회서비스이용권(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 (민간서비스) 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민간기관 결연후원금 등